

# 2019년 금융정책 방향

2018. 12. 20



본 자료는 금융연구원의 2019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 관련 자료로서,  
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.

## I. 2019년 경제 · 금융여건

II. 2018년 금융정책 평가

III. 2019년 금융정책 방향

- ◆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성장세 전망
- ◆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악화되는 모습
  - 경기수축국면(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'17.5월에 98.6으로 정점)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그 동안 누적된 부문별·지역별 양극화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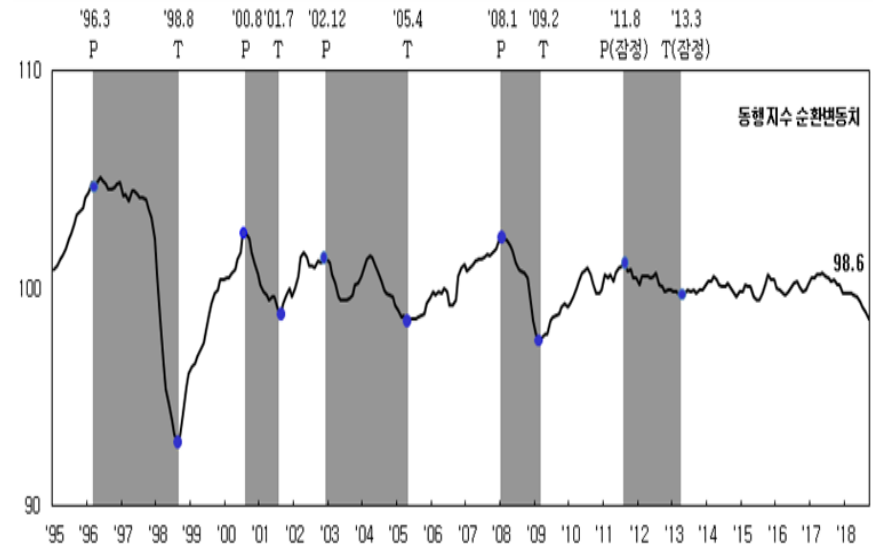
## 경제성장률 전망

	2017	2018			2019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GDP	3.1	2.8	2.5	2.7	2.7	2.5	2.6
민간소비	2.6	3.2	2.4	2.8	2.4	2.7	2.6
건설투자	7.6	△0.1	△4.8	△2.6	△2.9	△3.5	△3.2
설비투자	14.6	1.9	△6.7	△2.4	1.3	3.1	2.1
총수출	1.9	3.2	3.8	3.5	2.7	1.5	2.1
총수입	7.0	3.1	1.1	2.1	0.5	2.9	1.7

주 : 2018년 하반기 이후는 KIF전망치

자료 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## 경기순환적 흐름 (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)



주: 1)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. P는 각 경기순환기별 정점, T는 저점  
자료: 통계청

- ◆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**재조정 압력**이 지속
- ◆ 금융산업은 **부문별 · 지역별**로 자산건전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

## 금융시장

-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산 가격조정(re-pricing) 압력 지속
- 미 · 중 통상갈등, 취약 개도국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선호 축소(risk off)
- 수익률곡선 평탄화 압력 지속

## 금융산업

- 신용리스크 관련 건전성 이슈 부각 가능성
- 기술 · 혁신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
- 디지털금융, 포용적 금융,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필요성 확대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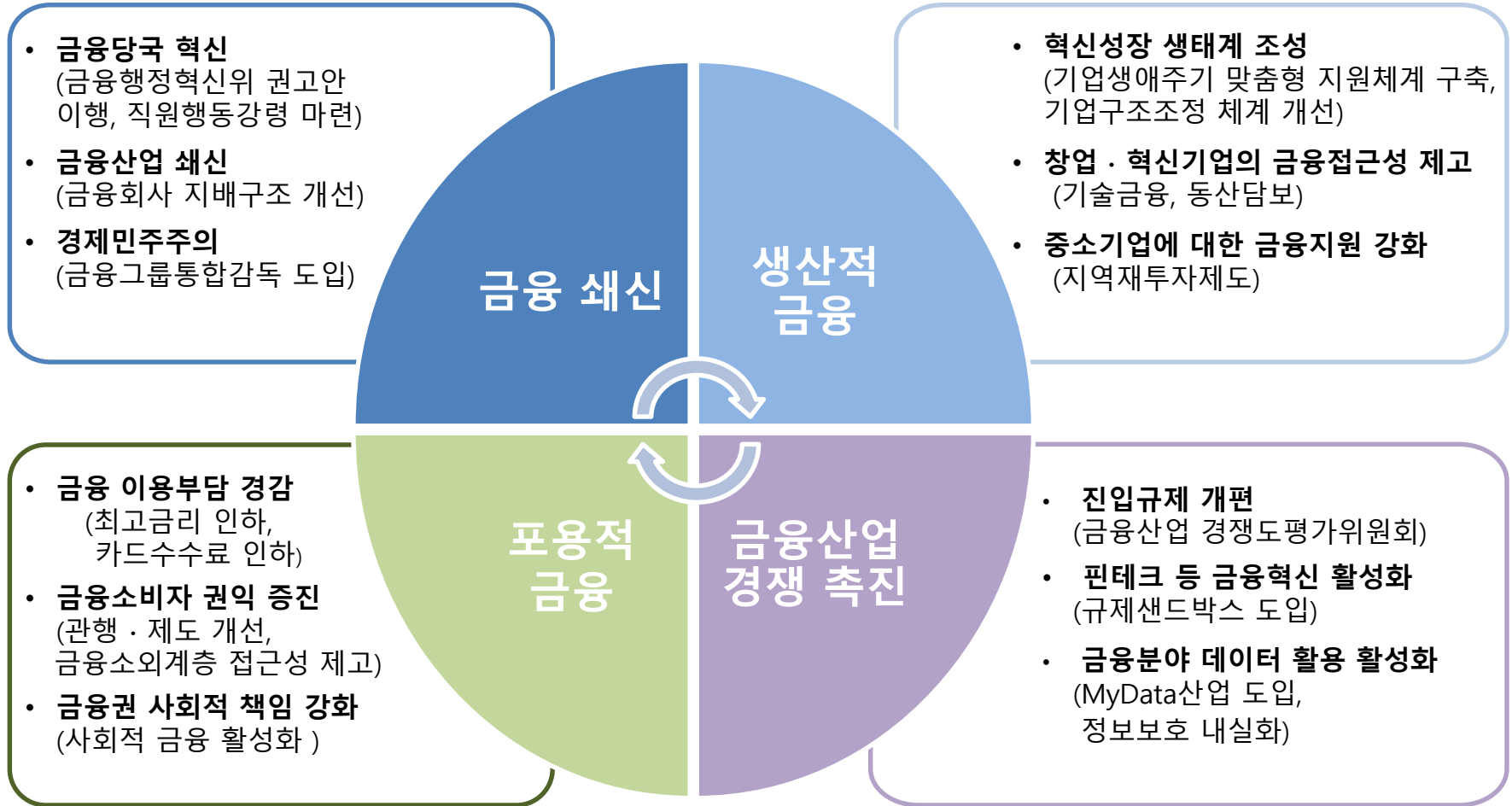
---

I. 2019년 경제 • 금융여건

**II. 2018년 금융정책 평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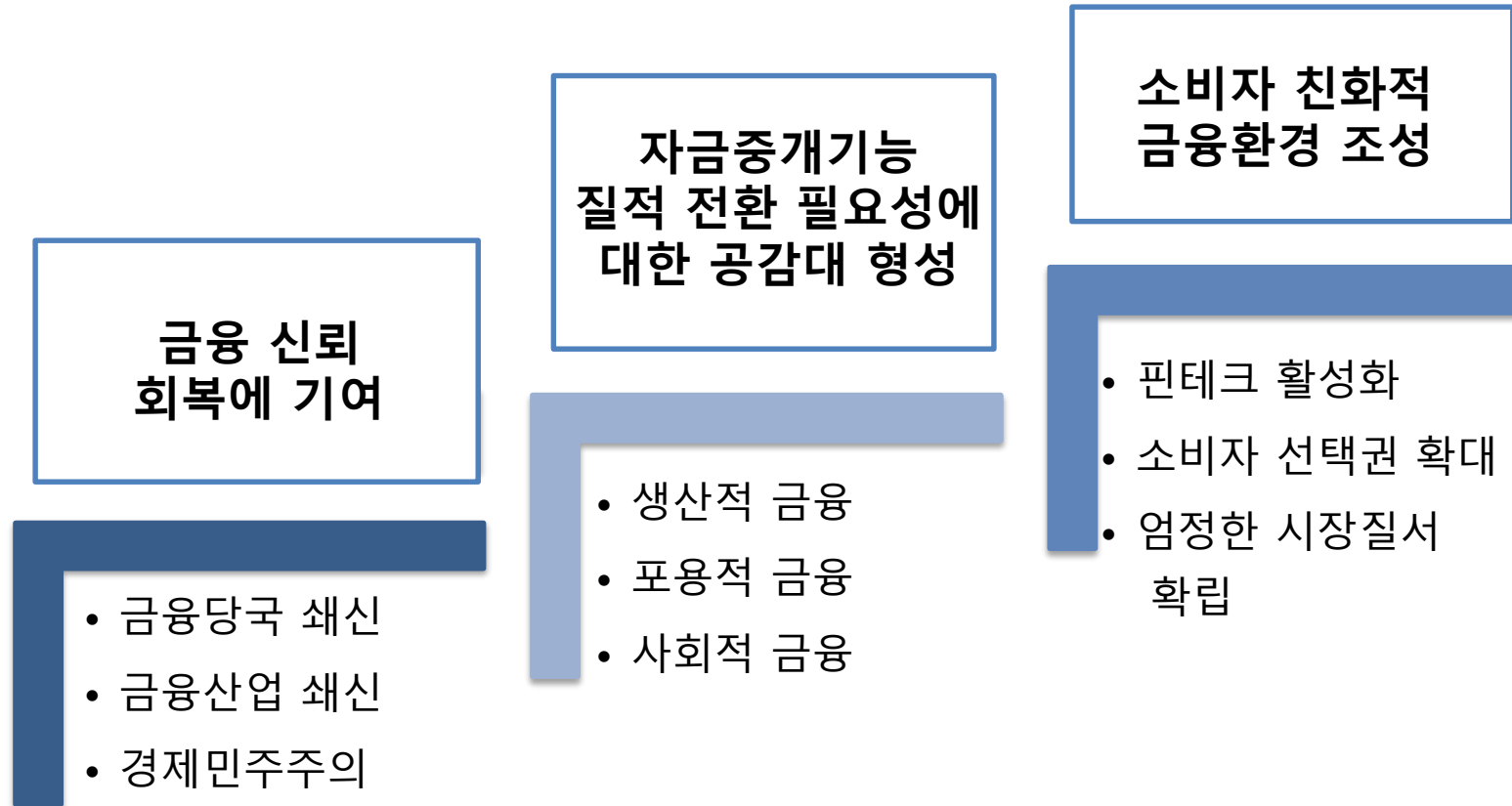
III. 2019년 금융정책 방향

# 4대 전략에 기반한 금융혁신 추진



# 정책효과 극대화 도모

## ◆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정책효과 극대화를 도모



# 목 차

---

I. 2019년 경제 • 금융환경

II. 2018년 금융정책 평가

**III. 2019년 금융정책 방향**



##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추진

- 금융소비자 행태연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
- 금융 디지털 진전을 감안한 소비자보호
-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

## 금융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워크아웃 효율성 제고
-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완화
-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

## 금융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혁신 가속화

- 개방적 디지털금융 추진
-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관련 후속조치
-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기능 활성화

## 금융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

- 온렌딩 대출 활성화
- 건전성 규제지표 개선
- 특별계정 확대에 따른 감독기반 개선

#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추진

## 금융소비자 행태연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

- 금융회사의 소비자의 행태편향(behavior bias)\* 악용 가능성에 대처  
\* 풀림현상(herding), 주먹구구식 의사결정(rule of thumb), 과신(overconfidence) 등
- 실험(experiment) 및 조사에 근거한 소비자 심리적·인지적 특성 파악
- 정책 사이클의 모든 과정(사전평가, 실행, 효과 평가)에 적용

## 금융 디지털 진전을 감안한 소비자보호

- 금융서비스 과정(개발, 판매 전략, 판매, 판매 이후)별로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
-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(financial literacy) 지원을 강화
- 디지털 공시체계\*를 디지털 이해력이 낮은 소비자 기준으로 평가  
\* 비대면채널에서의 민원제기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

##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

- 사회적 금융 인프라\* 구축  
\*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유,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
- 사회적금융 공급확대\* 방안 모색  
\* 대출, 보증, 투자 등

# 금융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혁신 가속화

## 개방적 디지털금융 추진

- 글로벌 차원의 오픈뱅킹(Open Banking)\* 추세에 대비
  - \* 오픈 API 활성화에 기반한 고객정보 공유,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등
-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\*
  - \*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법, 제도, 인프라의 종합적 개선

##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관련 후속조치

- 혁신금융사업자 선정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 모색
- 배타적 운영권(최대 2년)의 현실적 운영방안 마련\*
  - \* 금융 비즈니스모델의 유사성이 높음에 따라 배타적 운영권을 확대 적용할 경우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
- 해외 샌드박스 운영 국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

##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기능 활성화

- 민간 주도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도모
-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엑셀러레이터\*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설립 허용 검토
  - \*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, 사업공간 제공, 교육, 멘토링, 네트워크 등 종합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촉진 전문기관
- 글로벌 전문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 촉진

# 금융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

## 온렌딩 대출 활성화

-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목적 하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개편
- 지원대상\*, 취급기관을 재정비  
\* 중견기업 보다는 중소기업(특히 신용등급이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)을 대상으로 확대
-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및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 건전성 규제지표 개선

- 은행 중개기능 특성 및 사업 모델을 고려한 자본규제 구축\*  
\*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Pillar 2 활성화 모색
- 증권사 신 NCR(순자본비율)\* 산정방식 유효성 제고  
\* 순자본비율 = (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) / 필요유지자기자본

## 특별계정 확대에 따른 감독기반 개선

- 보험사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공시기능 강화\*  
\* 외부운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누수 등으로 순수익효과가 악화될 가능성 대비
- 보험기능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무적정성평가 시, 특별계정과 보험계정 간 분리방안 검토

# 금융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

## 워크아웃 효율성 제고

- 신용위험평가 추가 등급(B-)\* 도입 검토  
\* B등급과 C등급 사이 추가단계를 도입하여 대상기업을 확대
- 워크아웃 성과와 경영진 보상 연계 강화\*  
\* 구조조정지연에 대한 부실이연 손실을 구조조정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영진에 귀속
- 신규 자금지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 모색

## 강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완화
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\*  
\*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 우려가 발생함
- 경매유예제도 개선\*, 세일앤리스백제도 확장 등 모색  
\* 유예기간이 3개월로 짧은 데다 연체이자 발생으로 실효성 약화

##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

-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\* 모니터링 강화  
\* 대체투자펀드(부동산펀드 및 특수펀드), 부동산신탁, PF 및 관련 유동화증권(MBS, ABCP, ABSTB 등)
- 부동산시장 위험요소의 금융산업으로 전이 가능성 차단

**감사합니다!**